

부산지역 대형마트도 일요일에 영업한다!

-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 금년 5~7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 산업부장관, 부산시장, 기초지자체장, 부산시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부산시 박형준 시장과 함께 3월 7일(목) 오후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계획과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향상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획 중인 16개 기초지자체의 구청장, 군수 등과 유통업계 부산시장상인연합회장,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지난 1월 22일(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으로,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금년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구는 5월 중,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중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계기로 부산지역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마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유통의 취약한 마케팅과 판로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상품 특설매장 운영, 가격경쟁력 및 상품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유통 입점 지원 등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도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유통업계-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안덕근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세대 유출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완화에 기여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하며, 국내 유통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및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급변으로 부산시에서도 최근 5년간 6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는 등 지역 상권의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제는 대·중소 유통이 힘을 모아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으로, 부산시도 대·중소 유통의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김애경 (044-203-4383)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학윤 (051-888-4780)
		담당자	팀 장	강주희 (051-888-4743)
		담당자	주무관	권연희 (051-888-4744)